

‘절반의 승리’ 신창재 회장 소송 2R? 10

메타버스로 혁신기업 대표 만난 윤종원 회장 21

농협銀, 빗썸·코인원 실명계좌 발급 가닥... 신고 초읽기

‘코빗 제휴’ 신한도 막바지 검토
4대 거래소 모두 신고 마칠 듯

4대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현황

거래소명	제휴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여부	신고 현황
업비트	케이뱅크	○	8월 20일 신고
빗썸	NH농협은행	논의 중	확인서 협상 중
코인원	NH농협은행	논의 중	확인서 협상 중
코빗	신한은행	논의 중	확인서 협상 중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한다. 현재 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케이뱅크와 계약한 업비트가 유일하다. 코빗과 제휴 관계인 신한은행도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동안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던 4대 거래소가 차례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농협은행은 2주 전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 실사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마치고 관련 평가 점수를 도출했다. 이번 주 초 디지털전략팀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농협 관계자는 “그간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한 후로 뚜렷한 자금세탁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르면 8일경에 최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실명계좌를 통해 추적 가능한 경우 자금세탁이 용이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배경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농협은행이 그간 빗썸과 코인원에 요구해 온 가상자산 이동 제한 또한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을 막으면 소위 ‘가두리’ 현상이 발생, 코인을 통한 시세조종에 보다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업비트의 독주를 두고 독점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단초를 제공했다는 부담을 지기 어려웠을 것”이라

며 “(거래소 측은)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세탁보다 시세조종, 유사수신, 투자자문사기 문제 비중을 더 크게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이 자금세탁 방지에 주력해온 점 역시 크게 작용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2017년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이후(자금세탁방지에 대해)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막판 협의에서는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방지 장치 강화가 관건이 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트래블 룰’ 의무가 아직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은행들이 거래소에 이를 보완할 방안을 요구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송신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자산을 수신하는 거래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업비트가 제일 먼저 신고를 마친 만큼, 빗썸과 코인원도 확인서가 발급되는 대로 신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신고심사에는 접수 후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IU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FIU 내에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 중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수리 후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7일 열린 ‘하이드로젠 웨이브(Hydrogen Wave)’ 글로벌 온라인 행사에서 첫 공개한 무인 운송 시스템 콘셉트 모델리티 ‘트레일러 드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2040년 수소사회 실현”

‘하이드로젠 웨이브’ 수소행사

현대자동차그룹이 2040년을 수소에너지 대중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상용차는 수소전기(FCEV) 또는 전기차(BEV)로만 출시한다. 상용차의 전면적인 전동화를 선언한 건 세계 완성차 제조사 중 현대차가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7일 ‘하이드로젠 웨이브(Hydrogen Wave)’ 글로벌 온라인 행사를 열고 그룹의 미래 수소 사회 청사진을 공개했다. 하이드로젠 웨이브는 현대차그룹이 처음 선보이는 수소 관련 행사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소 사회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정 회장은 기조 발표자로 나서 “현대차 그룹이 꿈꾸는 미래 수소 사회 비전은 수소에너지를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

2028년까지 대형 트럭·버스 등 모든 상용차에 수소연료전지 적용 무인운송 ‘트레일러 드론’ 첫 공개

나’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수소 사회를 2040년까지 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 상용차 대중화로 전 지구적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앞으로 대형 트럭, 버스 등 모든 상용차 신 모델은 수소전기차와 전기차로 출시해 배출가스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한다. 2028년까지는 세계 완성차 업계 최초로 이미 출시된 모델을 포함한 모든 상용차 제품군에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전 세계 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소형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장 5~7m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PBV(목격기반 모델리티)를 개

발하고, 향후 상용차 부문에 자율주행과 로보틱스까지 결합해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행사에서는 미래 장거리 물류를 위한 현대차그룹의 무인 운송 시스템 콘셉트 모델리티인 ‘트레일러 드론’이 최초로 공개됐다. 트레일러 드론은 수소연료전지와 완전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2대의 ‘e-Bogie(이-보기)’ 위에 트레일러가 얹혀져 있는 신개념 운송 모델리티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내놓을 3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시제품인 100kW급과 200kW급 연료전지시스템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100kW급 연료전지시스템은 넥쏘에 적용된 2세대 연료전지시스템보다 부피를 30% 줄였지만, 출력은 2배 정도 강화했다. 내구성도 2~3배 높였고, 가격은 지금보다 50% 이상 낮춘다.

수소차에 전기차의 강점을 융합한 고성능 수소연료전지차 ‘비전 FK’도 이날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유창욱 기자 woogi@

전국 아파트값, 3.3㎡당 2000만원 돌파

전세·분양가와 격차 더 벌어져
분양 경기 기대감은 한풀 꺾여

현재 서울 25개 구 가운데 3.3㎡당 아파트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곳은 중랑구(2977만 원)와 금천구(2764만 원) 등 두 곳뿐이다.

매매가격이 전세가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지난달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국 66.9%, 서울 55.3%(KB부동산 통계 자료 참조)로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3.3㎡당 매매가와 분양가 차이도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29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2050만 원)와의 차이는 76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집값은 들쭉이고 있지만, 분양 경기 기대감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84.6으로 지난달보다 10.3포인트(p) 하락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만, 매매가는 그 이상으로 뛰면서 전세가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000만 원을 넘어섰다.

7일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시세는 두 기관 조사에서 모두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돌파했다.

서울의 경우 KB 조사에서 4569만 원, 부동산114 조사에서 4002만 원으로 각각 4500만 원, 4000만 원을 넘어섰다.

KB 조사에서 지난달 서초구는 3.3㎡당 7073만 원으로, 강남구(7897만 원)에 이어 7000만 원을 넘겼다. 성동구는 5036만 원을 기록해 송파구(5817만 원), 용산구(5487만 원)에 이어 5000만 원이 넘는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GS-포스코, 이차전지·수소 ‘신사업 동맹’

그룹 교류회 열고 협력키로

GS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사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진다. GS그룹은 7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E타워에서 ‘GS-포스코그룹 교류회’를 열고 이차전지 재활용과 신모빌리티, 수소사업, 벤처·펀드, 친환경 바이오 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5개 분야에서 양사의 핵심 신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류회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홍순기 (주)GS 사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GS그룹과 포스코그룹은 ‘배터리 재활용 및 신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했다.

포스코는 5월 화유코발트사와 합작으로 ‘포스코HY클린메탈’을 설립하고 이차전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스crap을 주원료로 활용하는 이차전지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다. GS그룹은 자동차 정비와 주유,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이차전지 재활용 원료 공급을 위해 포스코그룹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하기로 했다. GS에너지가 투자 중인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진단·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폐

배터리를 정비, 재사용 또는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서비스형배터리(BaaS)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수소사업’ 분야에서는 해외 프로젝트 공동 참여와 신규 수요처 발굴 등 블루·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두 그룹을 대표해 GS에너지 에너지지원사업본부장과 포스코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은 수소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면에 계속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더 똑똑해지는 편의점... 스마트·무인·플랫폼 '혁신'

이마트24 스마트 코엑스점, 상품 들고나오면 자동 결제 CU-하나銀, 계좌개설·보안카드 재발급 등 금융 서비스 GS25, LGU+ 기술 활용해 무인·하이브리드 점포 구축

5만여 개에 달하는 전국의 편의점이 '혁신 실험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슬세권(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가까운 지역) 영향력에 힘입어 '일상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편의점은 물건만 판매하는 단순 소매점이길 거부한다. 최근 업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는 '스마트화', '무인화', '플랫폼 확장'이다. 모두 첨단 기술을 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술력을 갖춘 이종(異種) 산업과 결합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미래형 편의점을 구축, 독점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입지를 다지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마트24와 그룹 시스템통합(SI) 계열 사신세계아이앤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협업체 8일 서울 코엑스 스타필드에 '이마트24 스마트 코엑스점'을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완전스마트매장'은 소량한 상품을 들고 매장을 나가면 인공지능(AI) 비전, 무게 센서, 클라우드 POS(판매시점관리) 등 리테일테크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되는 매장을 뜻한다. 신세계아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셀프서비스 스토어' 기술이 적용됐다.

고객들은 매장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본인 신용(체크)카드를 인증 및 출입 QR코드를 받아 입장할 수 있다. 매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최초 인증된 카드로 자동 결제가 진행된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는 "가맹점과 고객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유통'과 '금융'을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BGF리테일은 하나은행과 미래형 혁신채널 구축 및 디지털 신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온·오프라인 채널 융합 및 디지털 혁신 점포 구축 △고객 데이터 융합을 통한 제휴 상품 및 서비스 출시 △결제 서비스 공동개발 △MZ세대 맞춤형 공동 이벤트 등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BGF리테일과 하나은행은 서울 송파구에 'CU X 하나은행 금융 특화 편의점'을 오픈한다. 해당 점포의 인근 500m 내에는 일반 은행 및 자동화지점이 하나도 없어

업체	최근 동향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과기정통부 '이마트24 스마트 코엑스점' 오픈
BGF리테일	'완전스마트매장' 국가 기술 표준 제시 하나은행과 미래형 혁신채널 구축 업무협약 체결 유통에 '금융' 더해 플랫폼 확장
GS리테일	LG유플러스 손잡고 '스마트 스토어' 구축 박차 '미래형 점포에 LG유플러스 IoT 기술 적용'

금융 업무가 필요한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점포는 CU가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상점자 표시 편의점(PLCS, Private Label Convenience Store)이다. CU는 "상점자 표시 편의점은 기존 스텝인출방식을 넘어 공간의 공유와 함께 제휴 브랜드의 서비스 및 콘텐츠를 상호 완벽하게 결합하는 플라보 점포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특화 편의점에는 금융 서비스를 위

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은행 스마트 셀프존을 만든다. 하나은행 스마트 셀프존에는 종합금융기기인 STM(Smart Teller Machine)이 설치돼 은행 상담원 연결을 통해 계좌 개설, 통장 재발행,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OTP) 발급 등 영업점에 가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업무가 가능하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첨단 점포 구축을 위해 통신사인 LG유플러스와 손잡았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LG유플러스의 AI 영상 인식 CCTV를 편의점 GS25, GS더프레시(GS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적용해 매장 내 고객의 동선, 상품 탐색 순서 등을 분석한다.

또 GS리테일은 점차 늘어나는 무인형, 하이브리드 점포 등 미래형 매장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LG유플러스의 무선, IoT(사물인터넷) 관련 통신 기술을 적용한다. 온오프라인 물류 단계별 신선식품의 상태 확인 및 관계가 가능한 'IoT 온·습도계', 무인 디지털 판매대 'IoT 스마트 쇼케이스' 장비 등을 테스트 도입하고, 향후 협업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비트코인 가격이 7일 오전 6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7일(현지시각)부터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코인원 전광판 모습. 뉴시스

엘살바도르 법정통화 희소식... 비트코인 '6000만 원 재돌파'

국내외서 녀 달 만에 최고가

가상자산(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 채택을 앞두고 6000만 원대를 돌파했다.

7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기준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월 이후 녀 달 만에 6000만 원을 돌파한 6100만 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일(현지시간) 5만2794.90달러(약 6113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

의 법정화폐 채택의 영향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위터와 레드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 사이에서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채택일인 7일에 맞춰 30달러어치씩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게임스톱'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나이프 부캐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6일 트위터에 "정부가 비트코인 200개를 추가 매입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이 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엘살바도르는 현재 비트코인을 약 400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금액상으로 2100만 달러 정도이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은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다. 7일부터 비트

코인으로 세금 결제가 가능하며, 모든 경제 주체들은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사용자에게 비트코인 지갑 치보(Chivo)와 함께 3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다. 곳곳에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ATM이 설치됐고, 비트코인 사용법을 설명해 주는 안내데스크도 마련됐다.

CNBC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약 70%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다. 일반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때로는 해외 송금에 10% 이상의 수수료가 붙는다. 이와 비교해 비트코인은 송금 수수료가 낮고 편리하다는 장점

이 있어 더 많은 사람이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게 부캐레 대통령의 설명이다.

하지만 롤러코스터 수준의 가격 변동은 리스크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나 은행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거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엘살바도르 내 여론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현지 대학인 호세시메온카냐스대학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9%가 비트코인 도입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지사이신문(닛케이)은 "해외에서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사람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비트코인 채택에 긍정적이지만, 일반 국민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당신의 능력개발에 디지털 혁신을 더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수소 모빌리티로 '에너지 패러다임' 까지 바꾼다

150년 지속 석유시대 종말 예고
수소연료전기차, 상용차 집중
열차·선박·항공기까지 확대
다양한 모빌리티로 전방위 공략

현대차그룹이 2040년을 '수소 대중화의 원년'으로 천명하자 자동차 업계는 물론, 재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 관심이 폭발했다.

좁게는 자동차 기업의 경영전략 전환에 불과하지만 시야를 더 확대하면 약 150년 동안 우리가 의존했던 석유 에너지의 종말을 의미한다. 현대차가 주도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대적 전환도 시작됐다.

현대차그룹이 미래 수소 사회 청사진을 공개한 7일, 독일 뮌헨에서는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IAA 모빌리티 2021'이 개막했다. 글로벌 산업계의 이목이 쏠린 행사를 통해 '수소 사회 대전환'을 선언한 셈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제시한 청사진에 따라 향후 제품 및 경영 전략도 더욱 명확해졌다.

예컨대 수소전기차의 최대 장점은 '짧은 충전시간'이다. 3~4시간씩 걸리던 전기차와 달리 수소전기차는 20분 안팎의 짧은 수소 주입(65kW 기준)만 필요했다. 그리고 고도 400km를 거뜬히 달린다. 그러나 배터리 기술이 급진전하면서 일반 양산 전기차도 80% 충전에 40분 안팎이면 충분해졌다. 짧은 충전 시간이라는 수소전기차의



정의선(가운데) 현대차그룹 회장은 7일 '하이드로젠 웨이브' 글로벌 온라인 행사에서 "현대차그룹이 꿈꾸는 수소사회는 수소 에너지를 '누구나, 모든 곳에, 어디에서나'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왼쪽) 현대차 디자인담당 전무와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 부사장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장점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기술 특성에 따라 수소전기차는 상용차에 집중하기로 했다. 승용차나 1톤 트럭처럼 소형 전기차는 현재처럼 배터리를 활용하되, 수소탱크를 여러 장착할 수 있는 대형 상용차는 수소전기차가 더 유리하다. 이를 앞세워 전체 상용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정 회장은 기존연설을 통해 '누구나, 모든 곳에, 어디에서나'를 강조했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자동차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특정 시장에 집중하는 대신 분야를 확대하며 영토를 넓히고 있다. 토요타가 중국시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현대차는 수소전기 시스템을 열차와 선

박, 항공기까지 확대한다.

수소 로드맵 공개로 현대차그룹의 중장기 전략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도 뚜렷해졌다.

현대차그룹은 "전장 5~7m의 수소연료전지 목적기반 모빌리티(PBV)를 개발하고, 향후 상용차 부문에 자율주행과 로봇릭스까지 결합해 사업 역량을 강화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2030년 PBV 시장 규모 전망치는 약 700만 대다. 한 해 동안 현대차와 기아가 판매하는 양과 맞먹는다.

이밖에 재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레스큐 드론 △3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무인운송 '트레일러 드론' △고성능 수소연료전지차 '비전 FK' 등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앞세운 전방위적 제품 전략

도 이날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를 충전하거나 외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모빌리티들도 선보였다. 'H 무빙 스테이션'은 수소전기차에 수소 충전 설비를 장착한 이동형 수소충전소로, 충전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충전소가 없는 곳에 투입된다. 2023년 내 놓을 3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시제품인 100kW급·200kW급 연료전지시스템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3세대 연료전지시스템은 수소차의 가격을 지금보다 50% 이상 낮출 뿐 아니라 전력 공급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그동안 감춰왔던 '패'를 내보인 만큼 경쟁사에 또 다른 목표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2040년 수소 시대 진입이라는 목표 시점도 일정 부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회장은 "수소는 인류가 환경재앙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강력한 솔루션 중 하나임이 확실하다"며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수소 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이동식 수소충전소 'H 무빙 스테이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레스큐 드론'.

현대차, R&D 인력 대규모 채용

연구개발본부 세 자릿수 뽑아
UAM·AI·SW 부문도 모집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R&D) 인재 채용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 핵심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연구개발본부에서 일할 신입 사원을 세 자릿수 규모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차량개발 프로젝트 관리 △연구개발 기획·경영 △차량 아키텍처 개발 △UX/HMI(사용자 환경) 개발 △차시 시스템 개발 △바디 시스템 개발 △차량 성능 평가 및 개발 △차량 재료 개발 △배터리 시스템 개발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 총 19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27일까지다.

현대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town)'을 활용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9~10일 진행한다. 참가 희망자는 8일까지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채용 홍보 페이지'에서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대차는 2019년 공채를 폐지한 뒤 현업 부서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충원해왔다. 그중에서도 연구개발본부의 인재 채용은 수시로 이어졌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연구개발본부 산하 수소연료전지, 배터리 등 62개 직무에서 신입·경력사원 채용이 있었다. 같은 해 하반기에 세 자릿수 규모로 신입사원을 뽑았다. 올해 들어서는 4월에 연구개발본부 전 부문에서 신입·인턴사원을 대거 채용했다. 이후 5개월여 만에 제차 인재 수혈에 나선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UAM(도심항공교통) 부문도 경력 연구원 채용에 나섰다. UAM사업부는 현재 △비행체 체계 종합 △수소연료전지 항공용 파워트레인 개발 △비행체 시스템 신뢰도 예측 및 분석 △UAM 선행기술 개발 등 9개 부문에서 경력 연구직을 뽑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인력을 확충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UAM 부문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6월 현대차가 미국에 설립한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Genesis Air Mobility LLC) 법인의 지분을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나눠 가지며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갖췄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인재 모집에 적극적이다. 현대차는 '에어스(AIRS)컴퍼니'를 중심으로 경력 연구원을 채용 중이다. 에어스 컴퍼니는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차량용 음성 인식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자동차 산업 변화에 맞춰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현대차의 인재 영입 속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물류를 클릭하다 첼로 스퀘어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번거롭고 복잡한 국제 물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고 편리하게,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5천여 명의 물류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십시오.



지금 회원 가입 한 번으로
첼로 스퀘어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보십시오.

SAMSUNG SDS

반도체 품귀 수년 더 지속... 車 가격 오른다

글로벌 전기차 도입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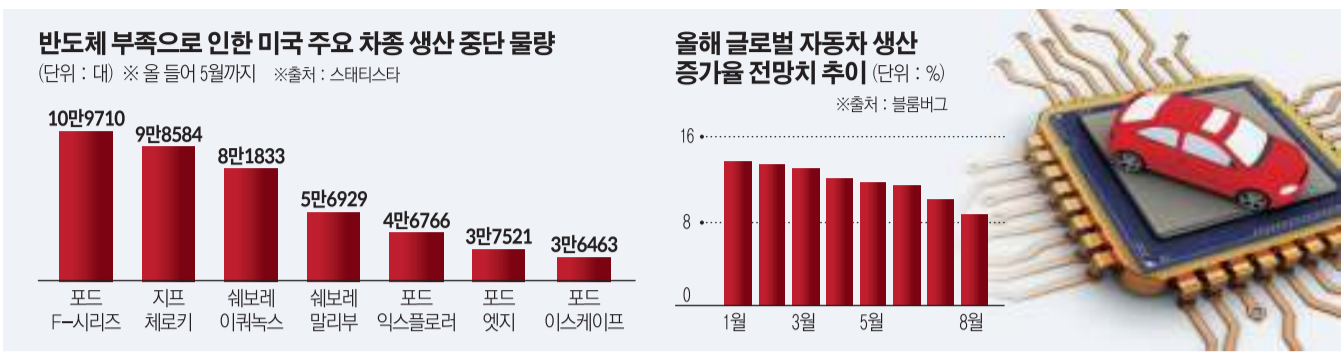
포드 2024년까지 부족 전망
리튬·플라스틱·철강도 품귀
美 신차 평균 판매가격 8% ↑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차 도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최소 수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됐다. 업체 대표들이 하나같이 우려를 내비치고 있어 자동차 가격 상승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주요 업체 대표들은 독일 뮌헨 모터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폭스바겐의 헤르베르트 디스 최고경영자(CE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면 반도체 부족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한동안은 전반적인 반도체 부족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에 반도체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들은 주로 말레이시아에 밀집해 있는



데, 최근 이곳이 몇 주 동안 코로나19 타격을 받으면서 공장 상당수가 폐쇄됐다. 디스 CEO는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해선 “반도체 부족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어 가고 있다”며 “중국에서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매우 심각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군나르 헤르만 포드 유럽이사회 의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이 2024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전기차 사업으로 이동하면서 반도체 부족이 악화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포드 포커스는 대략 반도체 300개가 활

용되지만, 포드의 신형 전기차 중 하나는 최대 3000개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포드는 이번 주부터 F-150 픽업트럭을 포함한 일부 차종 생산을 줄이고 미국 디어본 공장과 쉐보레 공장 교대근무도 줄이기로 했다. 포드는 “반도체 부족으로 올해 2분기에만 70만대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다임러의 올라 켈레니우스 CEO 역시 같은 우려를 전했다. 그는 “3분기가 혼란의 바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분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4분기 회복을 희망하지만, 생산 시스템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반도체 문제는 내년까지 이어져 그 다음 해 완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량 부품 공급사 보쉬의 헤럴드 크뢰거 이사 역시 “플레이스테이션 5부터 전동 칩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망이 무너진 것”이라며 “2월 텍사스 겨울 폭풍과 3월 일본 공장 화재 등이 겹치면서 자동차 산업에서 반도체 공급망은 더는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반도체 이외 다른 원자재도 공급이 부족해질 위기에 직면했다. 헤르만 포드 의장은 “반도체뿐 아니라 리튬과 플라스틱, 철강 모두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자동차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자동차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미국 자동차 평가기관 KelleyBluebook에 따르면 신차 평균 판매가는 7월에 4만 2736달러(약 4945만 원)로 전년보다 8% 오르고 4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8월 미국 신차 판매는 공급 부족으로 약 18% 감소했다.

BMW는 이날 배터리 주문을 종전 120억 유로(약 17조 원)에서 200억 유로 이상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그만큼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으로 보인다.

올리버 칩세 BMW CEO는 “이번에 주문한 배터리들은 2024년까지 생산 예정인 i4 세단과 iX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BMW는 내년 차세대 배터리로의 전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BMW의 늘어난 주문은 한국 삼성SDI, 중국 CATL, 스웨덴 노스볼트 등 글로벌 주요 배터리 생산업체에 걸쳐 있다”며 “배터리와 원자재의 충분한 확보는 기존 업계의 전기차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사업 대신 비전 담아 새 간판 거는 기업들

한화종합화학→한화임팩트
SK종합화학→SK지오센트릭
기존 이미지 벗고 도약 의지

재계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사명을 변경 중이다. 양적 성장을 주도해 온 이전 먹거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에 따라 기존의 기업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다. 인수·합병(M&A)이나 대주주 변경, 계열사 통합 등으로 인한 사명 변경과 사투 다른 행보다.

7일 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사명을 변경했거나 변경을 검토 중인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 한화종합화학은 사명을 ‘한화임팩트(Hanwha Impact)’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015년 한화그룹이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하며 ‘한화종합화학’을 설립한 지 6년 만이다.

회사 측은 “기술 혁신을 통해 긍정적인 임팩트(Impact·영향)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담았다”고 사명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존 화학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수소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와 모빌리티, 융합기술 등 혁신기술에 대한 ‘임팩트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SK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 SK종합화학도 1일 사명을 ‘SK지오센트릭(SK geocentric)’으로 교체했다. SK종합화학 출범 후 10년 만이다.

SK 측은 “새 사명에 ‘지구와 환경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겠다’라는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명 변경과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공언했다. 한화와 SK 모두 ‘화학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나 회사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을 사명에 담았다.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를 새 사명에 담았다는 것도 닮은 점이다.

이보다 앞서 LG에서 분리된 LX그룹도 주요 계열사의 사명을 교체한 바 있다. LG상사가 LX그룹에 편입되면서 올해 7월부터 사명을 ‘LX인터내셔널’로 바꿨다.

LX를 공통분모로 삼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기존 무역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친환경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포함했다.

5월에는 SK건설이 “건설을 넘어 환경기업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아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처럼 사명 변경은 새로운 사업 추진과 연결돼 있다. 한국아쿠르트가 사명을 hy로 교체한 것 역시 ‘음료기업’의 한정된 이미지를 벗어나 유통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아(KIA)’이다. 기아는 올해 1월 기존 사명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떼고 기아로 다시 출발했다. 1990년 기아산업에서 기아차로 이름을 바꾼 지 31년 만이다. 자동차를 떼고 제조 중심의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다.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비전에 따라 회사명을 교체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디지털 접목 친환경 중심 미래사업 함께 발굴”

GS-포스코 ‘신사업 동맹’
▶1면서 계속



7일 서울 강남구 GSE타워에서 열린 ‘포스코-GS 그룹 교류회’에서 최정우(왼쪽) 포스코그룹 회장과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친환경 바이오 사업’ 분야에서는 GS칼텍스의 바이오 연료 생산기술, 판매 인프라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팜(야자나무) 농장, 가공 설비를 활용해 팜 정제유 사업 확대와 재생 원료 바탕의 바이오항공유 등 차세대 바이오연료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 그 밖에도 양 그룹이 보유한 벤처 투자 인프라를 활용한 이차전지·수소 분야 유망기업 공동 발굴, 주요 사업장 탄소저감 활동 추진 등 ESG 경영을 포함해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앞으로 두 그룹은 양사 경영진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허태수 회장은 “양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산 그리고 탄탄한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을 접목한 친환경 중심의 미래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성장시켜 고객과 사회를 위한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회장은 “이번 교류회가 수소, 배터리 등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그룹 차원의 협력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양 그룹 협력이 국가 차원의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명 뉴타운·성남·부천 등 70곳 공공재개발 신청

대단지 가능성 높은 수도권 81%

경기 광명·고양·성남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총 70곳에서 공공 주도 개발 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 정비사업) 민간 공모를 신청했다. 수도권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통합 공모 추진 결과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 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20곳, 공공정비사업 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 3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5곳,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에 달했다. 고양시 7곳(2만1000가구), 성남시 4곳(1만3000가구), 광명시 4곳(7000가구),

공공개발 민간제안 통합공모 접수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구분	합계(70곳)	수도권(57곳)			비수도권(13곳)		
		경기(46곳)	인천(12곳)	부산(6곳)	대구(3곳)	대전(3곳)	대전(3곳)
도심 복합사업(34곳)	역세권	20곳	7곳	6곳	3곳	2곳	2곳
	준공업	2곳	2곳	-	-	-	-
	저층주거지	12곳	10곳	1곳	1곳	-	-
공공정비(13곳)	직접시행	3곳	2곳	-	-	1곳	-
	공공재개발	10곳	8곳	1곳	1곳	-	-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3곳	3곳	-	-	-	-	
소규모 정비(20곳)	재개발	13곳	11곳	-	1곳	-	1곳
	재건축	7곳	2곳	4곳	-	-	1곳

부천시 5곳(3000가구), 인천 부평구 9곳(3000가구) 등이다. 경기권에선 광명시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시 원도심, 고양시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들도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나서길 희망했다.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된다. 도심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정비사업은 관련 법의 국회의

결의(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 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후보지와 동일한 기준이다.

공공재개발은 공모 접수 결과 발표일 8일 이후 신속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최종 후보지 발표 시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코인 투 코인거래>

“중소 거래소에 코인마켓 허용하고 추후 신고기회 부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청신호 ‘추후 신고뎀 승인’ 유예조치 언급 “원화마켓 막히면 빅4 지배력 커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책이 거론됐다. 은행 실명계좌가 요구되지 않는 코인마켓(원화 외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마켓)만을 운영하다, 추후 변경 신고를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형 거래소가 코인마켓으로 선회할 경우, 원화마켓에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 원화마켓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때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게 해주는 서비스다. 원화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코인을 다른 거래소 등에서 구매해 코인을 구입하는 코인마켓과 사용자 편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전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업체 30여 곳을 대상으로 신고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거래소에 대한 코인마켓의 유예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중소거래소들은 신고를 채 3주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종료시 주요 필요조치 권고사항
 ※ 코인마켓만 운영할 사업자의 경우 원화마켓을 9월 24일까지 반드시 종료해야 ※ 출처: 금융위원회

- 01 영업종료 공지**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 고객에 공지, 개별 통지
- 02 입금종료 및 예치금, 가상자산 출금 안내**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
- 03 회원정보 파기**
영업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가 요구된다.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을 운영하는 경우 실명계좌가 요구되지 않는다. 은행과의 제휴가 어려운 중소 거래소들은 코인마켓만을 우선 운영하고, 추후 실명계좌를 확보한 후에 사업자 신고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은행과의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던 터라, 아쉬운 대로 ISM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중소 거래소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에서 먼저 거래소의 현황이나 자료 제출, 내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다가도, 논의의 진전을 위해 은행을 찾아가면 문전박대하거나 입을 닫았다”며 “실명계좌를 받기 어려울 경우 코인마켓만

이라도 일단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코인마켓으로 출발했다가 차후 원화마켓, 실명계좌를 획득하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래소들의 주장이 많았다”며 “(차후)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신고를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신고해야 하는 내용들을 갖추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

는 내용과 준비한 실명계좌 확인서를 첨부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우선 남은 기간 실명계좌 발급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코인마켓만을 운영하는 식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화마켓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거래소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빈 서강대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시장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미 실명계좌를 받고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대 거래소의 지배력만 커질 수 있다”며 “결국 금융 거래는 신뢰가 핵심인데 기존 거래소와 후발주자의 격차가 벌어질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신고 설명회에서는 신고 서류, 트래블 등에 대한 현안 또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고서 양식이나 이후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은행과 거래소의 막판 협의 과정에서 트래블룰을 준수할 수 있을지가 뇌관으로 여겨지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는 것. 최근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에 대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간 합작법인 CODE를 꾸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실명계좌는 은행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면 불수리할 수도 있다”며 “(트래블룰의)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벼랑 끝’ 거래소 9곳 긴급성명 “원화마켓 제외 뎀 사업 못해”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지 못해 사실상 고사 위기에 놓인 가상자산 거래소 9개사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 이후에도 심사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나서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다스, 코인엔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빛코, 후오비 등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9개사는 7일 오후 한국블록체인협회 본사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이라며 “특금법 신고를 위해 원화마켓을 제거하면 향후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인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이 없이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실명계좌는 원화 거래를 제거하면 발급 없이도 신고할 수 있다.

9개사는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못했다. 원화마켓을 제거한 채로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거래소는 ‘원화마켓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금융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다”며 “은행이 기존의 업무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라는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 발표에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7일 블록체인협회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실명계좌는 없으나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신고 반려 없이 받아주고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거래소 난립을 막겠다는 게 특금법의 취지인데 지금은 실명계좌 발급으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9개사 대표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십억 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은행권도 통과가 어렵다는 ISMS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했음에도 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고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대승적 결단으로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심사 기간 중 보안 사고, 법률 위반 등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는 당장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산 기자 jinsan@

강원일보 구독자 120만 돌파!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보는
江原日報 X NAVER
 강원일보 창간 76년,
 네이버 모바일 뉴스채널에 입점해 구독자 12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江原日報社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T. 033)258-1000

“위드 코로나 10월말 가능” 변수는 감염 불감증 확산

정은경 “성인 80% 접종 예상” 수도권 주간 확진자 4% 증가

이르면 10월 말부터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변수는 방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목표치를 달성해도 확진자 발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방역체계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드 코로나의 적용 시기가 고령자 90% 이상, 성인 80% 이상 백신 접종 이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준이라면 언제쯤 위드 코로나 적용을 예상할 수 있느냐”고 묻자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그때부터는) 위드 코로나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수 대신 위중·중증환자, 사망자 수를 관리지표로 삼는 방역체계다. 전면적 방역조치 완화로, 다른 표현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다. 감염 불감증과 백신 거부감이 번지는 점

은 부담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P))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높다’는 응답은 7월 27.3%에서 8월 24.9%로 2.4%P 하락했다. ‘코로나19 감염 시 심각할 것이다’라는 응답도 83.4%에서 78.7%로 4.7%P 내렸다. 반면 ‘방역수칙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예방접종 의향’이 84.1%에서 76.1%로 8.0%P 급락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향후 방역 관리에도 부정적이다. 현재도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차 이상 예방접종률은 이날 10시 30분 기준 60%를 넘어섰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69.9%다. 반면, 수도권의 성인 접종률은 서울 66.4%, 인천 65.8%, 경기 65.2%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수도권에서 우선접종 대상인 고령층(60세 이상) 비율이 낮아서다. 접종



비어 있는 6인 테이블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수도권 ‘6인 모임’ 허용 이틀째인 7일 점심시간이 시작된 오전 11시 40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 모습. 4인 테이블은 대부분 손님이 있지만 6인 테이블은 비어 있다. 음식점 측은 정오가 지나서도 6인 손님이 없자 4인 손님들로 테이블을 채웠다. 업주들은 방역 조치 완화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당장 효과를 보진 어렵다는 반응이다. 연합뉴스

률 1위인 전남은 성인 접종률이 74.8%에 달한다.

인식 약화에 더한 접종률 격차로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의 주간 확진자 발생률(인구 10만 명당)은 4.5명으로 호남권

(1.4명)의 3배를 웃돌고 있다.

강도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1.8% 감소했지만,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오히려 전주 대비 3.9%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부동산정책〉

국책연구마져 “국민 향해 ‘애먼 칼’ 빼 불신만” 날선 비판

합동보고서, 정책 일관성·시장 개입 최소화 촉구 “공공부문, 폭리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아”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실정(失政)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7일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형 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등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

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기존의 규제·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문제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대출 정책의 틀을 바꾸고 공급정책도 공공주도, 민간육성 등 일관적이지 않아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한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이 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영평가가 보편화된 이래 공공 부문은 수치화·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과 공직자는)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조정하거나 방치했다”며 “오히려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 주범으로 본다주택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객관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등기부상주택을 명목상 소유한 것만으로 이를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통제가 정책 목표가 되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기자 ljm0403@

대통령 직속 소주성위원회·경사노위 ‘연대임금’ 주장

“고액 연봉자 임금 깎아 보전을”

정부가 대기업 근로자들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금을 낮춰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 소득층을 끌어내리는 하향 평준화 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7일 공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우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이 먼저 나서 주도적으로 연대를 실천해야 세상이 바뀔 것”이라며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97년 말 외환 위기를 맞았고, 이를 기점으로 많은 노동자가 외주화·비정규직화되는 한편, 대기업은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급 여력마저 저하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분절이 심화되고 말았다”며 “사회 연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임금 격차 해소의 가능성을 열고, 연대임금 정책이 정착될 때 비로소 격차는 좁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최저임금 정책 평가

와 과제’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선 소주성 위원장은 “CEO 등 고액연봉자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겨냥했다. 그는 “과도한 고액 연봉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임금격차 확대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정책을 통한 사회임금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불평등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한 ‘연대임금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적정 임금제와 임금공시제도 등 다양한 연대임금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사회 전체의 소득수준을 높여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일환 기자 whan@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 확 줄인다

암 등 6대 중증질환 대상 11월부터 최대 80% 지원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이 현행보다 최대 30%포인트(P) 확대된다. 연간 지원한도도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

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 외래 시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이다. 기준중위소득 100%(재산 5억4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개별심사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할 수 있다.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의 15%를 넘을 때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연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 일부가 지원된다.

개정안에는 일괄 50%로 적용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응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의 지원 비율은 80%로 확대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의 지원비율을 적용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00-200% 가구에는 기존대로 50%의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자격 완화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기준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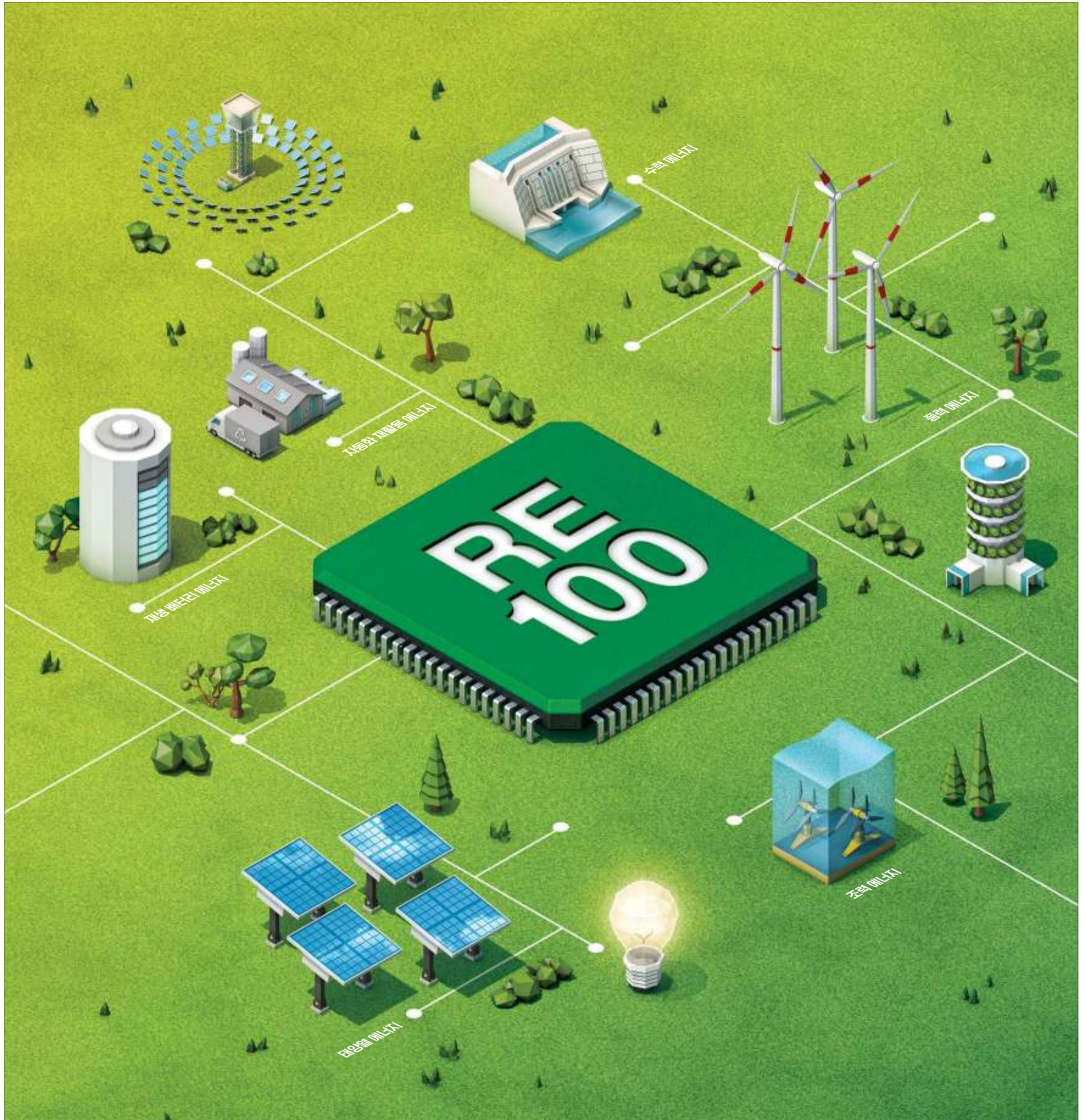
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가구 재산 요건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가구 단위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월 91만4000원, 4인 가구 243만8000원) 이하에서 60%(1인 가구 109만6000원, 4인 가

구 292만5000원) 이하로 변경했다. 고용부는 “이번 자격 요건 완화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제공하는 1유형에 한하는 것으로 올해 총 지원 인원인 45만 명(1유형)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사업이 8일부터 시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반도체를 넘어 환경을 고민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RE100 가입을 통해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만으로 조달하는 친환경적인 노력으로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

여야 '고발사주' 거친 공방...오늘 김웅 입장 표명 주목

민주당, 파상공세...이재명 캠프 "공동 대응 어려울 듯" 국힘, 반격 나섰지만 온도 차...대응팀 구성 9일 발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날 선 발언들만 오갈 뿐 실질적 조치는 양측 모두 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검과 법무부의 진상조사로 그칠 일이 아니다. 고발 접수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치검사와 국가기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까진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친 것인데, 이는 사건의 실제와 윤 전 총장의 관련성 여부가 확실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웅민 최고위원도 SNS에 "윤석열의 지시나 목인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는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고 추정만 하지만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의 관계, 고발장의 특이성 등 고려할 것들이 있다"고 추정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대선 경선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경선 후보 공동대응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느 후보도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추진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그러다 보니) 캠프 차원에서라도 논평을 내는 것 외에 선블리 판을 키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지만, 윤 전 총장의 경선 경쟁 후보들이 비판에 나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나서 비호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당 대표가 사안에 따라 즉각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이걸 좀 전담할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윤 전 총장 측도 확실한 증거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라 적극 대응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캠프 측 한 의원은 "증거도 없고 법률지원단에서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사실에 관한 말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어서 법적 조치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누굴 상대로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현재 과감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검찰이나 수사, 추가 증거·증언 등 계기가 생기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캠프가 '본선 대비'에 나서면서 윤 전 총장과 맞붙을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 검사의 고발장을 당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이 8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차원에서도 대응팀 구성 등 향후 대책을 9일 언급할 계획이다.

김웅호 기자 uknow@ 박준상 기자 joooon@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채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카카오 성공 이면엔 독점" 송영길, 대기업 답습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담 송갑석·이동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서면측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2015년 45개였던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2020년 118개로 증가했다"며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가 격인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낮은 단가, 무료 서비스로 업체와 이용자들을 모으면서, 결국 시장점유율을 독점하면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낙연 "네거티브 선거 않겠다"

미래지향적 정책 공약 집중 일각 "정세균과 단일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낙연(사진) 전 대표가 4일 첫 경선지인 대전·충남 및 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득표 수 자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절반에 그치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참패 원인을 네거티브 공세로 진단한 이 후보는 7일 경선 전략을 정책 공약 위주로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부터 정책과 메시지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며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를 받은 일도, 캠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대순 정치평론가는 이번 결과에 대해 호남의 지지를 받은 영남 후보론에 힘을 실었다. 황 평론가는 "권리당원 상당수가 호남 사람이다.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 외에는 호남 텃밭에 영남 후보를 내세워 노무현 정권, 문제



인 정권이 출범할 수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호남 후보로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이지 전략과 전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백악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황 평론가는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의 '백제발안'도 자조적으로 단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럴수록 이낙연 후보는 담담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 좁은 정세균 후보가 이 후보와 단일화한다면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낙연 후보의 시선은 25-26일 호남 지역 순회 경선으로 향했다. 그는 8일 호남 출신 국민 선거인단의 표심을 꺾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남인들을 뵙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與 "정기국회 과제 211개" 문 정부 말까지 입법 고삐

문재인 정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에 고삐를 쥔다는 방침이다. 7일 부동산 관련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 등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211개나 선정됐는데 국정과제도 상당히 남아 있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여야 논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진과제 일부를 공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는 법무부에서 마련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으로, 자영업자가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 2025년까지 0-1세 영아 대상 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과제로 언급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토지보상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도 포함됐다.

또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웅호 기자 uknow@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SLBM 탑재 전망
※ 2022년 8월께 실전 배치

안창호함 제원	톤수 3000t
	최대속력 37km/h (20노트)
	승조원 50여명

SLBM '현무 4-4' 명명
'현무 2B' (사거리 500km) 기반으로 개발

미사일 추진체 점화 ②

물밖으로 미사일 사출 ①

도산안창호함
KSSB-III

폭 9.6m

수직 발사관 6개

길이 83.5m

안창호함 특징

- 디젤/납축전지 + 공기불로 추진체(ABP) 수중 진행기간 증가
- 장비 국산화 비율 76% 달성
- 전력화 훈련 및 작전 수행 능력 평가 후 2022년 8월께 실전 배치

※ 출처 : 해군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세계 8번째 보유국 됐다

'도산안창호함'서 수중 발사 성공 현무 기반 사거리 500km 미사일

군이 최근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7일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1일 처음 진행됐다"며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무 4-4'로 명명된 국산 SLBM은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 2B'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SLBM은 잠수함 특유의 잠항 능력과 수중발사체계가 가지는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파괴력이 더해진 무기로 평가받는다.

군은 1~2차례 비공개 시험발사를 더 진행한 뒤 SLBM을 양산,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발된 SLBM은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될 전망이다.

군은 작년 말 SLBM 지상 사출 시험에 이어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사출 시험을 거친 뒤 지난달 13일 도산안창호함을 해군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사실상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군은 이달 중순 안창호함에서 추가 SLBM을 발사해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SLBM 개발 상황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 국방부는 "단위전력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은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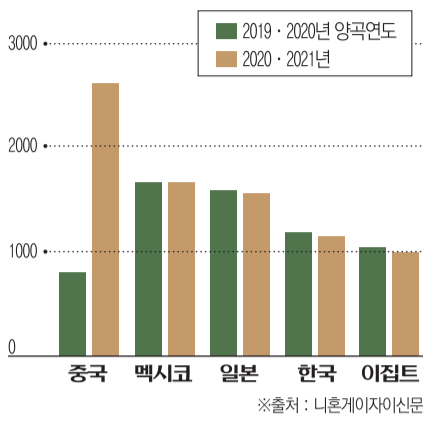
문 대통령 내외 추석 선물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5000여 명에게 선물을 보낸다. 올해 추석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또는 꿀와 팥도 쌀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됐다. 이번 추석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현장과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된다. 사진제공 청와대

‘곡식·비료·해운 싹쓸이’ 글로벌 식량안보 뒤흔드는 中

옥수수 수입량 전년비 3.4배 확대
남미 수입도 늘려 해상 운임 상승
국제 상품시장 ‘인플레이션’ 유발

중국 포함한 주요국 옥수수 수입량 비교
(단위: 만톤)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이 글로벌 곡물·해운·비료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7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이 식량안보를 이유로 해외시장에서 옥수수 등의 수입을 급격히 늘리면 서 올해 국제 상품시장에서 곡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정책 강화는 농산물의 안정 생산에 필수적인 화학비료의 원료나 해상 수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 10년 전 미국산 옥수수 매입을 처음 발표한 이후 중국의 대미 옥수수 수입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그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인 20·21양곡연도에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26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배나 폭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과 멕시코를 제치고 세계 최대 미국산 옥수수 수입국이 됐다.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11억1541만 톤의 옥수수 가운데 수

입량은 1억8421만 톤으로 17% 미만이다. 식용유나 사료 등 용도가 다양한 콩은 생산량의 45%를 수출할 수 있지만, 지금은 세계 교역량의 60%를 중국이 사들인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약 1억 톤으로 2010년의 두 배 이상이다. 옥수수마저 수입량을 한층 늘려나간다면 ‘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고 닛케이 분석했다. 실제로 시카고 선물시장에서는 올해를 한때 옥수수 가격이 7년 10개월 만에 밀을 넘기도 했다. 이례적 가격 역전에 따른 시장의 동요가 점쳐진다.

스미토 글로벌리서치의 훈마 다카유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매입이 급증한 요인 중 하나로 장강 유역의 심각한 홍

수 피해를 꼽았다. 그는 “중국이 시장 침체에 쌓아뒀던 재고의 상당 부분을 못 쓰게 됐으며, 이상 기후로 곡물 수출을 중단하는 생산국도 생겨났다”며 “이에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중국이 적극적으로 곡물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수입 증가는 국제 시세를 끌어올려 각국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국은 마·중 마찰 속에서 거리가 먼 남미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려 해상 운임이 급등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다고 닛케이 지적했다. 벌크선 시장을 나타내는 발틱해운지수가 지난달 급등한 것은 중국이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입항 규칙을 엄격하게 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은 해외 농지나 식품·유통 기업 인수에 나서는가 하면,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는 화학비료 원료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 결과는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 농가로 이어졌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5월 말 “6~10월 비료 가격을 지난해 11월~올해 5월 대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주요 산지의 수요가 왕성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요에 연화칼륨 국제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변효선 기자 hsbyun@

中 창업자, 빅테크 규제 불똥 ‘JD닷컴’ 회장 등 줄줄이 퇴진

중국 당국의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IT 신화를 일궈낸 빅테크 창업자들이 속속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JD닷컴은 창업자 류창동이 그룹 회장과 최고경영자(CEO)직을 유지하지만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난다고 밝혔다. 일선에서 물러난 류 회장은 앞으로 장기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임으로는 자회사 정동유통 CEO인 쉬레이가 새로 신설된 총재직을 맡아 그룹 경영을 총괄한다.

류 회장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 함께 IT 거물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는 47세였던 2007년 JD닷컴을 설립했으며 2014년 미국 나스닥에 회사를 상장시켰다. 지난해 6월에는 홍콩증시에 2차 상장했다. 그러던 류 회장은 2019년 미국에서 미네소타 대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중국에서 큰 사회적 비난을 샀다. 현지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는 했지만 사법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그 뒤로 공개석상에 거의 나오지 못했다.

경영에서 손 떼기로 선언한 IT기업 총수는 더 있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업체 핀뉘이의 창업자 황정도 3월 돌연 퇴진 의사를 밝히며 주식의결권까지 내렸다.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도 회사 상장 추진을 하다가 지난 5월 돌연 올해 연말 CEO



JD닷컴 창업자 류창동 회장. 신화뉴스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WSJ는 최근 중국 당국이 해외 증시 상장은 물론 기업 합병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반독점 및 근로조건 등으로 빅테크를 계속 압박하면서 여러 기업 총수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JD닷컴은 데이터 관련한 규제를 준수하라는 당국의 시장명령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온라인 가격 책정과 기업 합병 사항을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최대 음식배달앱 메이커인 국영 언론사가 배달 운전자의 근로 문제를 비판한 이후 의무 휴식시간을 도입했고, 바이트댄스는 최근 주말 초과 근무 정책을 폐기해야 했다.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에 이어 기업들은 최근에는 ‘공동부유’를 위한 기부 압박도 받고 있다. 알리바바는 “공동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약 18조 원)을 들여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알리바바와 더불어 중국 IT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텐센트는 500억 위안 기부를 약속했다. 핀뉘이는 100억 위안을 들여 농업과학기술 전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미얀마 민주진영, 군부에 선전포고
미얀마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두와 라시라 대통령 대행이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쿠데타 발생 후 7개월 만에 나온 선전포고로 내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현지 언론 매체들은 미얀마 정규군은 40만 명 이상이라며 무력 저항이 통할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AP연합뉴스

美 ‘델타’ 여파에 출장 수요도 뚝 기대 빛나간 항공·호텔업계 올상

미국 항공·호텔 업계의 비즈니스 출장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인 ‘델타’의 확산에 따라 사그라들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항공사와 호텔은 가장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기동 중 하나인 출장이 향후 수개월 내에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었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빛나게 됐다. 항공업계는 애초 이달 미국의 비즈니스 여행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약 60%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델타 감염 확대로 비즈니스 출장은 물론, 출근·대면 미팅·행사 재개 등을 줄줄이 미루고 있다. 실제로 미국 호텔·숙박협회가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장을 앞둔 400명 이상의 응답자 가운데 60%가 이를 연기하겠다고 답했다. 또 67%는 이전보다 출장을 더 적게 다닐 것 같다고 이야기했으며, 68%는 출장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불확실성이 기업의 출장 재개 의사를 꺾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주 회원국들에 미국으로부터의 비필수적인

여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대부분 회원국은 미국발 여행을 즉시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스웨덴이 금지조치를 도입할 의향을 표명했다. 이밖에도 입국 요건을 변경하기 시작한 국가가 있다.

유전자 변이로 전염성이 더 강해진 델타 바이러스는 출장과 레저 여행 양쪽 수요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항공업계 간부는 “최근 수주 사이에 예약 기세가 꺾인 반면, 취소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미국 보건당국이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백신 미접종자에게 여행을 삼갈 것을 권고했다. 로셀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여행 결정 시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중증 환자 급증으로 인한 병원 병상 부족 사태도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의 중환자실(ICU) 병상의 79.83%가 사용 중이며, 조지아·텍사스·플로리다·미시시피·네바다·켄터키 등 8개 주에서는 성인용 중환자실의 90%가 이미 다 차버렸다.

변효선 기자 hsbyun@

“유럽은행 조세피난처 악용, 최저세율 도입 필요”

EU조세관측소 “연평균 27兆 달러 수익, 글로벌 법인세 적용해야”

유럽 은행들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글로벌 최저세율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조세관측소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럽 11개국에 본사를 둔 36개 유럽은행의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들 은행이 연평균 200억 유로(약 27조 원) 상당의 자금을 조세피난처에 맡긴 채 거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전체 수익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로, 버뮤다와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홍콩, 쿠웨이트 등 활용된 조세피난처만 17곳에 달한다.

이 기간 은행 수익의 약 65%가 해외 계열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실적이 기록된 국가와 직원들이 근무한 국가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직원 1인당 은행 수익은 조세피난처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익의 25%는 세율 15% 미만인 국가에서 회계 처리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세관측소 측은 “조세피난처의 직원 1인당 수익이 23만8000유로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 6만5000유로 수준이었다”며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 유럽 은행들이 조세피난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에 은행들은 고의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HSBC는 “우리 홍콩에서 가장 큰 은행은

로, 수익 상당 부분이 그곳에서 꾸준히 발생해 왔다”며 “인위적으로 세율이 낮은 지역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 역시 “우리는 고의로 낮은 세율 지역을 전용 거래 구역으로 삼지 않는다”며 “세금 최소화가 유일한 목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NBC는 은행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해선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 주도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15%)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아일랜드와 헝가리 등 일부 국가가 아직 동참하지 않아 최종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세관측소 연구원들은 “최저세율이 전 세계에 부과되면 유럽 은행들은 매년 30억~50억 유로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디스플레이>

'폴더블 DP 소재' 개발한 LG화학, 삼성에 도전장

실리콘 기반 新코팅 기술 적용
인-아웃 '리얼 폴딩 윈도우' 개발
유리·플라스틱 장점 모두 갖춰



LG화학이 개발한 '리얼 폴딩 윈도우' 제품 사진(왼쪽). 삼성디스플레이가 선보인 7.2형 S자로 두번 접히는 'Flex In & Out' 제품.



사진제공 각사

LG화학이 안팎으로 접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를 개발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LG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LG화학은 특수 개발한 코팅제를 적용해 평면은 유리처럼 단단하면서도 접힘 부위는 플라스틱처럼 유연한 폴더블 IT 기기용 커버 윈도우인 '리얼 폴딩 윈도우(Real Folding Window)'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커버 윈도우란 IT 기기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충격에서 보호하면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다.

커버 윈도우 시장은 유리 기반의 UTG(Ultra Thin Glass)와 플라스틱 필름 기반의 투명폴리이미드필름(CPI)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UTG는 스크래치에 강하고 디자인 완성도가 높다. CPI는 부러지거나 접어다 펴도 자국이 남지 않고 경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폴더블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UTG를 적용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제품을 갤럭시 Z 시리즈에 적용하고 있다.

LG화학이 이번에 개발한 리얼 폴딩 윈도우는 유리과 플라스틱의 장점을 모두 합쳤다. 기존 폴리이미드(Polyimide) 필름이나 강화유리 형태의 소재와 달리 LG화

학의 신규 코팅 기술이 적용된 커버 윈도우는 유연함을 극대화하면서도 화면 연결 부위의 고질적인 접힘 자국을 개선했다. LG화학은 얇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PET 필름의 양면에 새로운 소재를 수십 μm(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두께로 코팅해 플라스틱 소재의 내열성과 기계적 물성을 보완했다. 기존의 폴리이미드 필름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유연성을 바탕으로 20만 회 이상 반복해 접어도 내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회사 측은 강조

했다. 화면 접힘 부위에 발생하는 주름도 대폭 개선했다. 특히, 화면이 안쪽으로 접히는 인폴딩(In-Folding) 방식에 더해 화면이 밖으로 접히는 아웃폴딩(Out-Folding) 방식까지 모두 구현할 수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PET 필름은 범용이고 저렴하다. 거기에 특수 개발한 실리콘 기반 고분자 하이브리드 용액을 코팅해 유리의 성분을 가지면서도 플라스틱처럼 유연하게 만들었다"라며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화두를 던지는 제품이다"

라고 말했다. LG화학은 별도 PET 필름 없이 코팅만으로도 얇은 형태의 리얼 폴딩 윈도우를 만드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열린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전시회(IMID)에서 영하 20도에서도 3만 회 폴딩이 가능한 폴더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3 등에 탑재됐다. 또 'S'자 형태로 두 번 접는 '플렉스 인 & 아웃(Flex In & Out)'을 비롯해 노트북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접목한 '플렉스 노트(Flex Note)' 등도 선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더블폰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증설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비리서치는 올해 폴더블폰용 커버 윈도우 시장 규모가 2억5210만 달러(약 3000억 원)에서 내년 4억2280만 달러(약 50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비리서치는 "향후 커버 윈도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어느 소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www.douzone.com
DOUZONE

비즈니스의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솔루션을 통합한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의 탄생 - **Amaranth 10**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결-공유를 통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해집니다.

솔루션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업무시간도 절약됩니다.

회계관리
HR
Groupware(UC)
일직업 업무관리
CRM
문서 관리

물동량 증가·친환경 규제에 발주 러시 신조선가, 10개월째 '고공행진'

신조선가지수 한 달새 1.5P ↑
컨테이너선 400만 달러 올라

신규 선박 가격이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선박 발주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선박 수요가 좀처럼 식지 않는 만큼 신규 선박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7일 영국 조선·해운 시장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 등에 따르면 신규건조선박 가격을 평균 지수화한 신조선가지수는 이날 기준 146포인트이다. 지난달 초(144.5포인트)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이로써 신조선가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선종별로 살펴보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가격(17만4000㎡ 기준)은 1억9900만 달러로, 지난달 초(1억9600만 달러) 대비 300만 달러 증가했다.

컨테이너선 가격(2만3000TEU 기준)은 400만 달러 오른 1억7900만 달러이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가격은 200만 달러 상승한 1억400만 달러이다.

신조선가 상승은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이 반등한 데 따른 결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박 주문을 머뭇거렸

신조선가지수 최근 추이

(단위: 포인트)
※출처: 클락슨리서치

연월	신조선가지수
2020년 11월	125
2021년 1월	127
3월	130
5월	136.1
8월	144.5
9월	146

던 선주들이 올해 들어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자 발주를 재개한 것이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7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297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전년 동기(949만CGT) 대비 213% 급증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 해인 2019년(1693만CGT)과 비교해도 75% 늘었다. 조선업계는 신조선가 상승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동량 증가, 친환경 규제 등으로 선주들이 발주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락슨리서치는 올해와 내년 신규 선박 발주량이 작년(795척)보다 50% 이상 증가한 약 1200척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2분기 영업손실 8973억 원을 기록했다. 조선용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예상 손실분을 2분기 실적에 미리 반영해서다. 대우조선해양(-1조74억 원), 삼성중공업(-4379억 원)도 적자에 머물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GS칼텍스, 친환경 기반 '미래형 주유소' 공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GS칼텍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미래형 주유소를 주제로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며 전 세계 도시와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도시를 그려나가는 행사다. GS칼텍스는 제주도와 협업해 미래형 주유소를 전시한다. 이 전시관에는 GS칼텍스의 미래형 주유소인 '에너지플러스 허브(energy plus hub)'를 모티브로 스마트 시티의 바탕인 친환경 에너지와 공유 모빌리티가 담겼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는 희망그림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호 생명사랑파트너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은행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호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841개* 생명사랑홍보센터

자살예방체계 구축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841개의 신한은행이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수 (2021년 8월 25일 기준)



13,673명* 생명지킴이

자살예방은 주변인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13,673명의 신한은행 전 직원이 생명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임직원 수 (2020년 말 경영공시 기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아이 놀이체험·어른 문화복지 증진 ‘일석이조’”

區석區석 박준희 관악구청장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위해 종합문화공간 ‘관악가족행복센터’ 건립
“건강한 가족, 사회의 기초 될 것... 구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가족의 고유한 기능에 역할을 해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우리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부터 출산·양육,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 환경조성 등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관악가족행복센터’도 결실 중 하나다.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 관악가족행복센터는 놀이체험관과 장난감·영유아도서관, 마을미디어센터를 갖는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다.

“예전에는 놀이체험 같은 공간이 없어서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른 자치구로 현장학습을 갔어요. 이용료까지 내면서요. 이제는 미디어와 어우러진 최신식 센터가 생겼습니다. 옛날처럼 벽돌식

으로 짙는 게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서 공간을 배치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은 물론 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기대가 정말 큼니다.”

그는 관악가족행복센터에 문화를 덧입혔다. 문화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직장인 여가 교육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들의 놀이문화는 물론 성인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다. 관악문화재단도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지금은 문화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민선 7기 들어 문화재단을 출범시킨 이유죠. 어떤 문화적 콘텐츠를 구현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관악가족행복센터’에 조성된 놀이체험관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져보고 있다. 사진제공 관악구

로 지정받으려고 노력도 하고요. 센터가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입전, 강감찬 등으로 핵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죠.”

박 구청장은 관악가족행복센터를 둘러보면서 가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

이자 사람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주체다. 박 구청장 역시 가족이 튼튼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가 최초의 보금자리이자 최후의 안식처인 가족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다.

“행복의 개념,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 부문이 지원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고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에서 사회 전체가 행복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죠. 보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육 정책에서 우리 구가 열약했는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었죠.”

관악구는 관악가족행복센터를 필두로 장애인, 청년을 위한 공간도 조성한다. 박 구청장은 노인을 위한 경로당은 많지만 장애인과 청년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2만여 명의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건립하고 있다. 청년 비율이 높은 관악구 특성을 고려해 청년청도 짓는 중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일이지만 미리 관련 부서를 꾸린 덕에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이나 사업을 하려면 재정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 도움을 받아야 하죠. 민선 7기에서 집행 기준으로 1조 원을 넘게 썼습니다. 구민들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홍인석 기자 mystic@**

“검정고시·취업 준비도 ‘서울런’으로”

서울시, 검정고시 121개·전문자격강의 176개 강좌 추가 개설

서울시가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검정고시·자격증·취업강좌 등 비교과 과정을 8일부터 서비스한다.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서울런’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는 오픈강의도 생긴다.

서울시는 서울런에 비교과 과정인 검정고시 콘텐츠 121강좌와 자격증·취업강좌인 전문자격강의 176개 강좌를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비교과 과정 콘텐츠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검정고시 등 학업을 준비하거나 자격증 등으로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다. 검정고시는 △중졸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핵심 요약 특강 △기출문제 해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자격강의는 △전기기사 △취업준비 △전산 세무회계 △NCS 특강 등 강의로 꾸려졌다.

일반 청소년과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강의도 확대한다. 취업·자격증 분야를 신설해 한식·양식·일식·중식 조리

기사, 제과·제빵 기사, 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미용사, 관광통역사 등 38개의 자격증 강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런’ 교육 대상을 일반 청소년과 청년으로 확대한다. 2023년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시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에 ‘서울런’에 추가 개설되는 비교과 과정은 검정고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학교 밖·다문화 청소년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를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 5개 등급으로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전국 272개 지방공기업 중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관리 매뉴얼 구축과 코로나19 TF 및 ‘Y-방역단’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사회적 책임전략을 수립하고 7개 분야 52건의 추진과제를 도출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충실히 이행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공단은 최근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에 이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조주연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중심의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재미

공감

즐거움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잼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잼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잼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광고 문의 (02) 799-6727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배달 손님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포스기를 놓고 간 날에는
손님들도 불편하고
저도 기름값 두 배로 들고
참 난감하죠.

근데 IBK BOX POS를 다운받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은 늘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내 폰을 POS기로

요즘 사장님을 위한 모바일 POS IBK BOX POS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IBK박스포스'를 검색해보세요!



POS 모드
메뉴 관리, 테이블 주문 관리 등
일반 POS 기능이 모두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모드
금액 입력 후 결제할 카드나 스마트폰을
사장님 스마트폰 가까이 대면 결제 완료



카드매출 입금확인
가게 매출이 카드사에 정상 매입되었는지,
대금 입금일은 언제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일간 재무리포트
일별로, 시간대별로, 메뉴별로
판매현황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준법감서인 심의필 제2021-2508호(2021.07.02) 유효기간(2022.07.01)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BOX POS 고객센터(☎02-729-763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목을 받지 않습니다. 물리경영 위안 사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HYUNDAI
MOTOR GROUP

수소, 그 위대한 시작

138억 년 전
거대한 우주가 탄생하던 순간에
수소가 함께 했습니다

태초의 그 깨끗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일의 지구를 위한
거대한 수소의 물결이 다가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변화의 서막

지구와 인류를 위한 위대한 여정
지금, 수소가 시작합니다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지금 눈앞에!**

혁신적인 수소 기술로 수소사회를 앞당기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사업이 시작됩니다
www.hydrogen-wave.com/kr/

